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 5. 28

관계부처 합동

정부3.0 관련 대통령 말씀

-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2013. 2. 25, 대통령취임사)
-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5,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시)
-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2013. 5. 13, 수석비서관 회의시)
- 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 시발점은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민간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2013. 5. 20 수석비서관 회의시)
-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16, 장차관 국정토론회시)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2
III. 정부3.0 세부과제	4
1.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4
2.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1
3.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16
IV. 정부3.0 추진체계	19
〈참고자료〉	
1. 추진일정	20
2.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 공개대상[예시]	22
3. 공공정보 개방 로드맵[예시]	23
4.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5

□ 행정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
 - 고용률 정체, 양극화 심화 등 위기를 타개할 신성장 동력 창출 시급
-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의 대두
 -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식량 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간·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 급증
-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국민간 관계 변화
 -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
 - 모바일·SNS 등 확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참여, 투명성 요구 증대
-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
 -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ICT 기술 활용 필요성 제기

□ 우리 정부의 현주소와 국민의 바람

-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책의 투명성·수용성 저하
 -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순위 ('08) 40위 → ('10) 39위 → ('12) 45위
- 정부 내 칸막이로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정부운영에 한계
 - *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 국가경쟁력 22위, 정부효율성 25위('12)
-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 저조
 - * OECD국가 중 자살률·이혼율 1위, 국민행복지수(GNH) 97위('12. 美갤럽조사)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 증대

1. 비전과 전략



2.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정부3.0」이란?

○ 정 의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방 향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현 재 (As-Is)	미 래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제약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미흡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신뢰성 제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 (원칙) i) 사실을 있는 그대로, ii) 전과정에 대하여, iii) 국민 중심으로 공개

*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한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의 참여자 및 이력관리 강화

- (대상)

예시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식품·위생)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 (치안) 학교폭력 현황, 청소년 범죄현황,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등
- (가정·복지) 유치원·어린이집·노안·장애인시설 정보,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 (지역물가) 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지자체별 주요 서민생활물가

예시②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공공사업) 하천, 도로 등 토목공사 관련 사항, 지역축제 원가정보
- (계약정보) 공사발주 세부내용 및 계약 전 과정

예시③ 예산집행내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지방재정)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
- (국정감사)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 (방법) 시민단체 공개 요구사항, 국민신문고 내역 분석, 분야별 여론조사, 언론보도 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공개수요가 큰 정보 파악, 선제적 공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예시) 》

<사례 1 : 지역 축제·행사 원가정보 공개>

◆ (현행) 지역축제 관련 총예산과 집행액, 불용액에 관한 정보만 한정적으로 공개

→ (개선) 공인된 기관에서 분석한 사업원가 및 수익내역 상세 공개

<세입세출결산서>

구분	금액
세입결산	입장료수익 5억
세출결산	축제비용 1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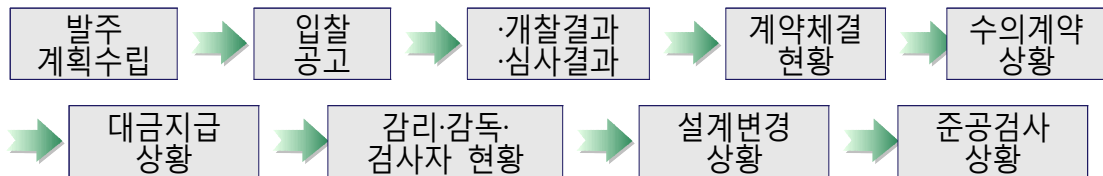
<재정운영보고서>

구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20억	5억	15억
△△ 축제	※원가내역		
	지출	10억	사업직접비
	기타지출	1억	사업외편성액
	출연금	7억	축제운영보조금
	비현금지출	2억	자산 감가상각

<사례 2 : 지방계약정보 공개 >

◆ (현행)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내역만 공개

→ (개선) 전 계약과정을 공개



<사례 3 :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관심항목 공개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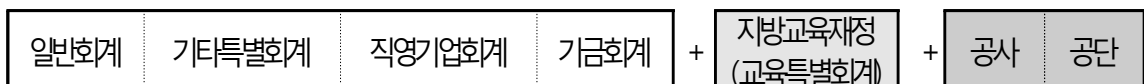
◆ (현행) 지방공기업 매년 44개 항목(일반현황, 부채) 공개

→ (개선) 이익배당 현황, 주요 계약사항 등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 임원 국외출장 정보, 직급별 직원현황 등 사회적 관심항목 추가

<사례 4 :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공개 >

◆ (현행) 지방일반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통계가 분리·공개

→ (개선) 지자체별 종합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통계 산출



○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 비공개대상(정보공개법 제9조) :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신체보호, 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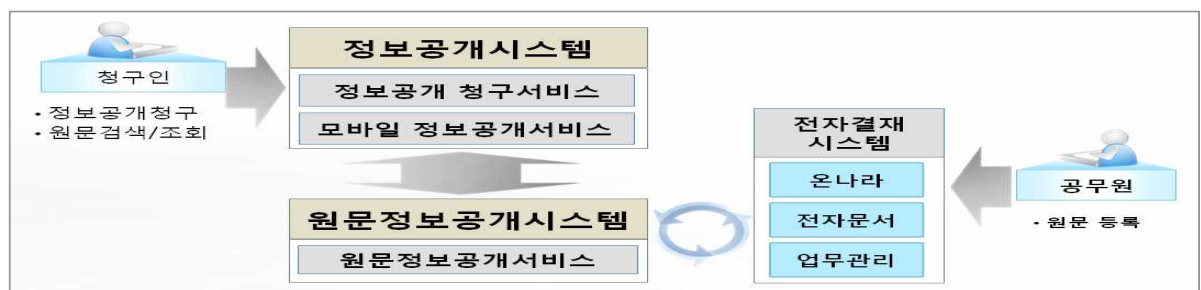
- 공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
- 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공개 시점	청구시 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공개
공개 대상	목록만 공개, 청구시 원문공개	원문까지 공개
공개 건수	(‘12년) 31만건	(매년) 1억건 (추정)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 추가 (약 1,700개 확대)

○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생산된 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 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중앙 및 시·도 우선 보급(‘14년) 후, 시·군·구로 확산(‘15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4.16)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

*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 : ('12년) 1,005종 → ('17년) 6,40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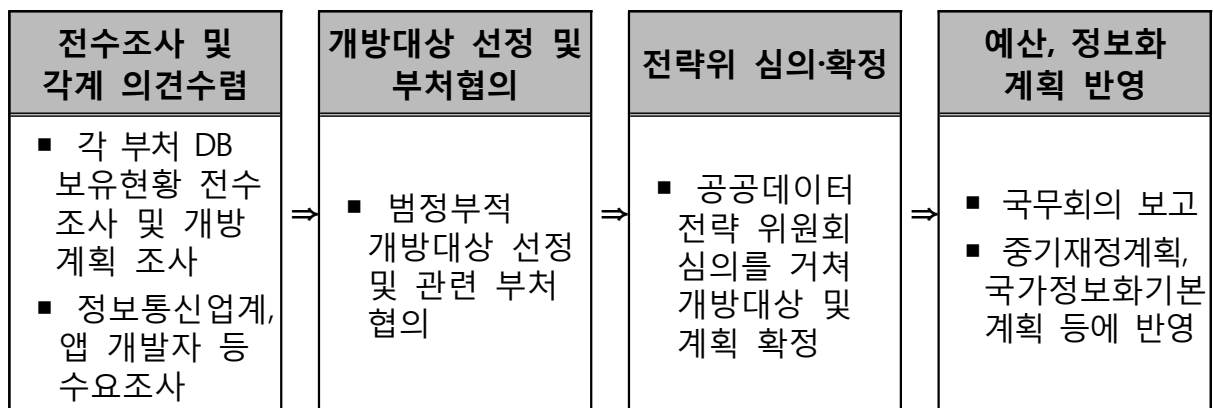
* 수요가 큰 변동데이터는 Open API로 별도 제공(안행부) : ('12년) 35종 → ('17년) 150종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계획(예시) >

구 분	현 행	확 대 (예시)
교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노선정보, 정류소정보 등 5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지하철·항공·항만운행 실시간정보, 지역별 교통정보, 도로정보 등 355종 ⇒ 모든 교통시설 및 운행정보 연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정보·주변시설정보 통합제공 등
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간정보, 해수면높이 관측정보, 국가지반정보, 국가 하천전자지도 등 7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제된 GIS정보,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지리정보 등 500종 ⇒ 다양한 정보(교통·재난·기상·관광)와의 융·복합으로 앱 및 신규 서비스 창출
교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일반현황, 교육 과정 정보 등 8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 평가정보, 입시 및 시험정보, 다양한 교재정보 등 533종 ⇒ 교육관련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로 신규시장 창출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체조사결과(전수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 '개방 5개년 로드맵' 수립('13.상반기)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예시) >

분야	AS-IS	TO-BE	
	1차 활용 (개별활용)	2차 활용 (정보간 연계)	3차 활용 (타산업과 융합)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 기상예보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 * 예: 기상컨설팅, 기상보험업, 기상점점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 기상정보를 농업, 건설, 레저, 식품, 유통, 의류산업 등 타산업과 융합·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상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재해보험컨설팅, 맞춤형날씨정보, 재해 예보, 에너지소비량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상정보-타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 예 1) : 기상정보를 활용해 특화작물 선정 파종시기 농약살포 시기 등 안내 * 예 2) : 기상정보를 도로 유지보수, 노면상태 점검, 항로설정, 이착륙 결정 등 비행계획 수립에 활용 * 예 3) : 음료, 주류, 빙과, 냉난방기 등 계절상품 생산업체가 원자재 구매, 생산 및 출고량 조절, 제품진열, 광고 등에 기상정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기상사업자, 기상통보관, 기상 앱 개발자, 기상시스템 개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기상컨설턴트,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기상정보를 농업, 교통, 건설, 레저 등 타산업과 융합해 서비스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 예 : 기상정보를 활용한 농작물 전문 인터넷 보험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기상산업('11년) : 종사자 35천명, 매출 9조(한국: 567명, 2,232억) ▶ 기상기후산업이 타산업과 융합해 발생하는 신규 창출('12년) : 396억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 교통정보 제공업, 교통방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 교통정보와 위치, 시설, 재난, 여행정보 등을 연계, 특화된 교통서비스 제공 * 예 : 고속도로 휴게시설 산업, 여행 렌트업, 스마트 자동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 교통정보를 관광, 물류, 무역, 의료, 부동산 산업 등 타산업과 융합·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버스도착시간 정보 등을 스마트폰·정류장안내시스템에서 실시간 안내, 차량 정체구간 실시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육상항공해상 등의 교통정보와 숙박요금 및 관광지 정보 등을 연계하여 일괄 예약하는 여행상품 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교통정보-타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 예 1) : 실시간 교통정보 및 CCTV정보 등을 물류, 무역업 등에 활용해 출·도착 시간 조정 및 물류란 해결 * 예 2) : 교통정보를 비상 응급정보와 융합해 구급차, 소방차 운행 효율화 * 예 3) : 교통정보를 부동산 정보와 융합해 최적의 부동산 입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교통예보관, 교통안내리포터, 교통 모바일 앱 개발자, 교통시스템 개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여행사 맞춤형 상품개발자, 교통서비스 분석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교통정보와 관광, 물류, 부동산 등 타산업과 융합해 서비스하는 일자리 창출 * 예 : 교통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가, 대체교통수단 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정보 이용시 비용절감 : 연 6,175억 절감 ▶ 교통정보 활용으로 교통혼잡비용 감소 : 연 약3조 6천억(전국 교통혼잡비용 : 연 약 30조)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창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종합 지원대책 마련
 - * 정부-민간 합동 추진단(T/F) 구성·운영
- 현장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발굴·수렴하여 집중 지원
 - * '범부처 융합 애로·규제 개선방안' 수립·추진
- 관련 부처, 기업, 협회 등 '협업 커뮤니티' 구축,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지원
- 창업구상-사업계획 수립-실행-기업경영 전과정에 대한 One-stop 지원

창업 구상	주요 지원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및 타당성 검증 ■ 지식재산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창업 경진대회 개최, 국민창업 프로젝트 신설 ■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기술로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지원 ■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지원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사업계획 수립	주요 지원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검토 ■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적정화 검토 ■ 일반 국민에게 소액자금을 모집하는 CROWD 펀딩 제도화 ■ 앱 전용 R&D 자금운영 및 지원 확대, SW 특화펀드 조성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 개설



사업 착수	주요 지원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인허가, 공장설립 ■ 인력충원 및 교육 ■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앱 창업 멘토단, 창업사관학교, 창업 아카데미 등 운영 ■ 경영관리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 경영	주요 지원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신고 ■ 세제지원 ■ 판로확보 및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추가 ■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협업체 구성·지원 ■ 정부가 '첫번째 고객 되어주기' 프로젝트 운영 ■ 수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등 집중지원하는 'Global highway 프로그램' 운영 ■ 수출준비자금 보증, 수출개시기업 자금보증 신설 등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사례 창출, 제2의 벤처붐 확산

○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

-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
- DB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하여 활용 편의성 제고
-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사업 확대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정보 선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등 신설·운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 법사위 계류중(5월) → 의결(6월 임시국회 예정)

3 민·관 협치 강화

○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확대
 - * 생활공감모니터단 확대·개편, 분야별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 전화·문자·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의견 등 접수
 - *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제안센터」 설치·운영('13.5월)

○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플랫폼) 구축

- 대규모 국책사업(예 : 5천억 이상)은 '전자 공공토론' 상정 의무화로 국민의 소리 반영 강화
-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젠다 설정, 정책형성, 집행 및 평가 전단계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 행정예고절차 개선, 청문·공청회 제도 운영 내실화 등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

☞ 「행정절차법」 개정('13.10월 국회제출)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현 재 (As-Is)	미 래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중심의 칸막이 현상 정부지식의 개별적·단편적 축적·활용 다양한 정책정보의 통합 활용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내 소통·협업 활성화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기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국정과제(140개) 및 협업과제(170개) 중 부처간 시스템 연계·통합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

- ▶ **통합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방통위(통신재난관리시스템) - 복지부(응급의료 시스템) - 방재청(재난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20개 기관, 27개 시스템) 연계
⇒ 범국가 재난관리정보 공유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 국세정보(국세청)-관세정보(관세청)-지방세 정보(안행부)-지자체 등 정보시스템(50개 기관, 130개 정보) 연계
⇒ 과세자료 분산관리에 따른 **착오부과 방지 및 누락세원 발굴**
-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KS, ISO, 단체표준 표시인증, 위생안전 기준인증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19개 부처, 185개) 연계
⇒ 각종 인증 등을 받기 위해 동일 검사를 **여러번 받는 비용과 불편 해소**

○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갈등과제’ 지원

- (대상) ODA, 유아교육·보육 통합, 물관리, 다문화가족, ICT 등

* 국조실 협업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 (지원방안)

- 관련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 협업수행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기능 조정에 반영
- 관련 부처간 핵심직위(국·과장급) 인사교류

○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력과제' 지원

- 부처간 협업으로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별 시스템 연계

▶ **국가긴급이송정보망 구축** : 긴급이송정보(방재청)-병원평가정보시스템(복지부) 등 연계

⇒ **긴급환자 이송시** 병원정보를 파악, **환자별 증세에 맞는 최단거리 병원**에 이송, 인명구조율 향상

▶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경력단절여성 정보(국방부/통일부/여가부) - 직업
훈련정보(고용부) - 중소기업 구인정보(중기청) - 사회복지통합망(복지부) 연계
⇒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희망 계층**에 대해 **직업
교육 등 본인 적성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재외국민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서비스 제공** : e-consul 시스템(외교부) -
운전면허 정보(경찰청) 연계

⇒ **외국에서 불가능했던 운전면허 갱신서비스를 영사관에서 제공**

▶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전자발찌)** : 위치추적장치(법무부) - 학교위치정보
(교육부) - 아동보육시설위치정보(복지부) 연계

⇒ **성범죄자 위치와 학교 및 보육시설 위치를 연계, 성범죄 재발 방지**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249종→349종) 및 이용기관(공공기관 등 추가) 확대로 정보 공유·활용기반 강화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소속부처와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이 PC·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및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각 부처의 정책정보, 출장·해외연수 결과 등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과 연계,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품질 제고

○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된 영상회의실* 이용 활성화('13.1~4, 총 59회 538명 활용)
 - * 국무회의용 2, 정부공용 4, 개별부처용 4, 스마트워크센터 13 등 23개
-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한 PC영상회의 병행 활용
- 스마트워크센터*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이용 확대
 - * 서울(55석, '13.1월), 세종(95석, '12.12월), 과천(20석, '13.4월), 국회(63석, '13.4월) 등
- 출장·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메일·메모보고 활용 지원
 - * 보안문제 해결 후 결재까지 지원 추진('14년 이후)

○ 지식·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17)
 - *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60%(약 740개)를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17)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

-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파악 등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국가적 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 수립 지원
 - * 국가지식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 데이터 분석·활용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고용 창출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다양한 공공·민간정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품질 향상 지원
- 안전, 복지 등 6대 분야 16개 시범과제 추진(3개 과제 우선 추진)

- ▶ (치안) 범죄발생 장소·시간 예측을 통한 범죄발생 최소화(경찰청, 안행부 등)
- ▶ (재난·재해) 예측기반의 자연재해 조기 감지·대응(기상청, 방재청 등)
- ▶ (교통안전)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경찰청, 지자체 등)

○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

- 각 부처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연계하고, 공유·분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부처별 시스템 중복구축 방지



<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 >

-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기본가치를 정부운영의 전 과정에 확산
-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민간간 전 방위적으로 정부운영제도 혁신

○ 유연하고 과제 지향적인 조직관리

- 조직진단으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협업체계 재설계 및 특정 시·도 대상 시범실시
- 부처·부서간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중심형 조직(부처간 T/F 등) 적극 활용
- 부처단위 정원관리를 탈피한 「범정부 통합정원제*」 도입

* 매년 전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 협업과제에 정원 우선 배정

○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협업문화 조성

- 중앙부처 핵심보직(국·과장)간 계획교류 및 「중앙-지방 교류목표제」 실시
- 협업관련 분야 인력 일정비율(10% 이상) 의무교류
-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 비율을 높이고(40%→50%), 전부처 대상으로 공모하는 직위를 현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

* 외부기관 경력 여부를 본부 실·국장 임용 심사에 반영하고, 교류자에 대한 승진·수당·보직 등 인센티브 제공

○ 협업과제 중심의 예산·평가제도 운영

- (예산) 협업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협업 T/F에 관련 예산 조정 권한 부여, 협업 우수기관에 예산 인센티브 제공

* 예산 심의시 '타 기관 업무 중복성' 및 '협업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 협업 선도과제 관련예산을 통합심의하고 우선 지원

- (평가) 정부업무평가에 '협업추진 실적'을 포함한 정부3.0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주관부처가 아닌 참여부처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현 재 (As-Is)	미 래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행정서비스별 개별 신청·제공 Ⅰ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미흡 Ⅰ 정보기술과 행정서비스간 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Ⅰ 접근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Ⅰ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생애주기별·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으로 지원

* (사례) 출생신고시 보육비 지원신청, 예방접종 일정 안내 등

- 부처별 시스템 통합·연계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시스템(복지부), 고용서비스정보망(고용부), 주민등록시스템(안행부)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예시) >



○ 「민원 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

-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안내

* (예) 민원처리결과,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세금·공과금 체납조회 등 통합 안내

○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 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간단e 납부** :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서울행정(지자체)-e지로 (금융결제원) 등 관련시스템(8개 부처, 244개 지자체, 22개 은행, 14개 카드사) 연계
⇒ **세금공과금 통합 납부**로 국민 편의 제고 및 징수·수납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 ▶ **재난피해주민 지원 시스템** : 복지정보(복지부)-통신정보(미래부)-전기정보 (산업부)-교육정보(교육부)-주민정보(안행부) 연계
⇒ **재난피해 주민에게** 세제 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등 **혜택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온라인 지원 신청 및 필요정보 제공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 유형별(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 (예) 경기도 김포시(종합민원과), 포천시(허가담당관실), 양주시(민원해결과) 등

○ 창업·기업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업활동 지원 전담반」 구성,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해결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

-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우체국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 집배원을 이용하여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생활상태 주기적 점검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

- 인터넷·앱 접근성 표준화 및 우수 웹사이트·앱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 영상수화 상담, 음성 민원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등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정보기술(전자태그, 위치정보 등)을 활용, 신개념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U-Gov) 구현

* 생활안전 · 환경안전 · 민생치안 · 맞춤형복지 등 6개 분야 대상 집중 추진

과 제 명(예시)	사 업 내 용
가축분뇨 전자 인수인계시스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불법방류 등을 사전 방지 - 가축분뇨의 배출, 운반, 처리자간 인계 과정에 GPS, 중량센서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구호물자의 실시간 재고 · 유통관리를 통해 지자체간 수급을 원활하게 관리 - RFID기반 물자관리시스템 확충 및 재해현장용 모바일앱 개발
음파활용 위해동물 퇴치 (국립공원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파, LED조명 등을 활용한 u-에코펜스 설치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 야생동물을 자동 감지하고 음파를 활용한 퇴치 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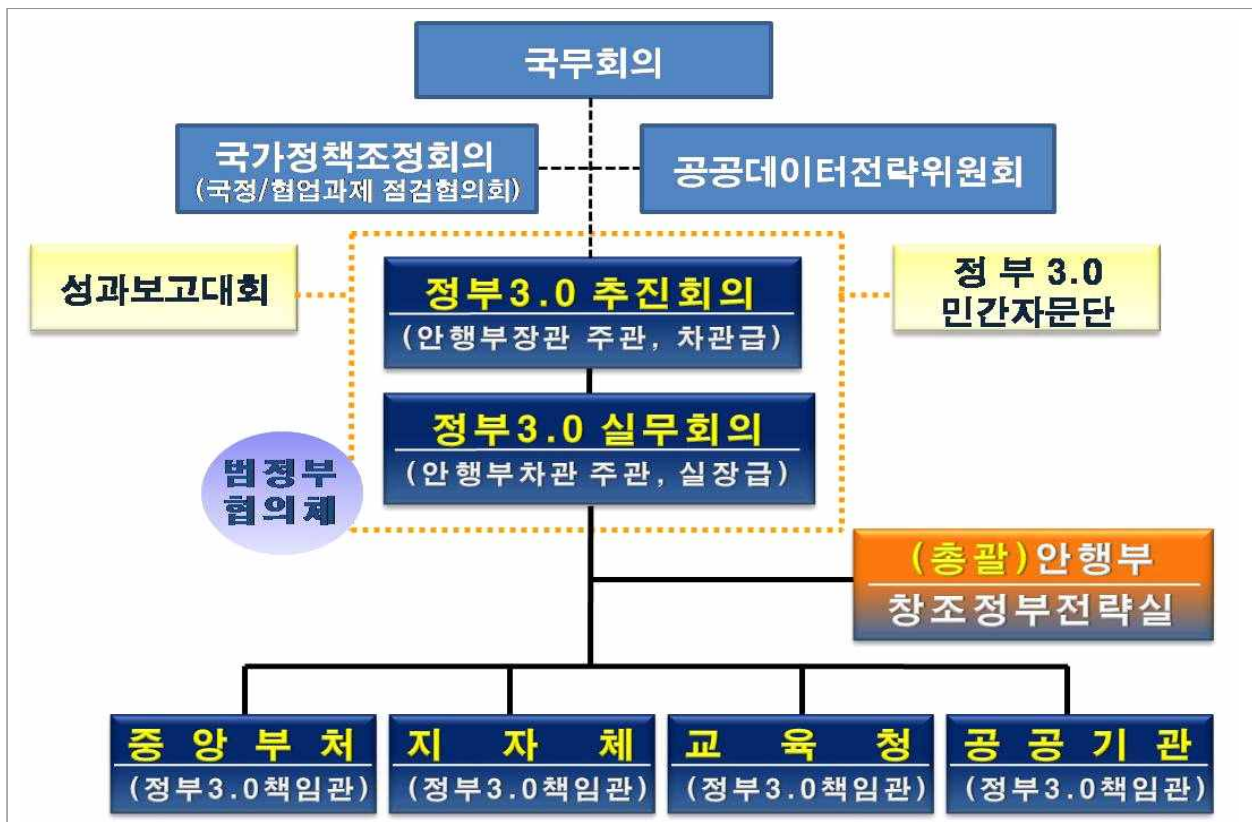
○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예시)

-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기능 강화(안행부)
- SOS 국민안심서비스 고도화(안행부, 경찰청)
- 도로이용 불편사항 신고 서비스(국토부)
-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외교부)
 - * 여권 분실, 교통사고, 질병 발생 등 주요 상황별로 메뉴 개편
-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한 안전한 산행정보 제공(환경부)
- ‘기업마을 앱’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정보 제공(중기청)
- 위치기반 공증사무소 검색 및 모바일 공증상담 서비스(법무부)
- 농업재해 관련 모바일 ‘안전영농 지키미’ 서비스(농식품부)

IV

정부3.0 추진체계

- **(정부3.0 협의체)** 정부내에는 정부3.0 추진회의(안행부장관 주관, 차관급) 및 실무회의(안행부차관 주관, 실장급)를 구성·운영하고,
 -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의견 적극 반영
 - * 기조실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책임관으로 지정(‘창의행정담당관’으로 변경 추진)
- **(국정과제)** 국정과제추진협의회(BH), 협업점검협의회(국조실) 등 국정과제관리체계를 활용, 국정·협업과제 지원 및 관리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통해 공공정보 적극개방 추진
- **(성과관리)**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개최, 정부3.0 전체 성과 관리



* 정부3.0 가치 공유·확산을 위해 전정부적 교육·홍보 적극 추진

참고 1 정부3.0 추진일정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분	기반마련 (~'13년 상반기)	본격추진 (~'13년 하반기)	정착 및 확산 (~'14년~'17년)
공공정보 적극공개로 국민 알 권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개정 ※ 4월 국회 제출 ○ 원문공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원문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령 전면 시행 ○ 원문공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시군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법 제정 ※ 5월 법사위 계류중 ○ 범정부 공공정보개방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오픈데이터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수준 평가, 환류 등 ○ 공공정보 활용센터 설치 운영, 주요DB 품질개선
민·관 협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민·관협업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연구 ○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행복제안센터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민·관협업 공간 시스템 개발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및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민·관협업 공간 운영 ○ 국민행복제안센터 기능 강화 등 고도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분	기반마련 (~'13년 상반기)	본격추진 (~'13년 하반기)	정착 및 확산 (~'14년~'17년)
정부 내 칸막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정보 연계·통합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정보 연계·통합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정보 연계·통합 시스템 운영
협업·소통 자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전환업무 부처 협의 및 확정 ○ 조직진단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개 업무시스템 클라 우드로 전환 ○ 인사교류 확대계획 수립 및 통합정원 인력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까지 620개 이상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정부통합의사소통 및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활용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기반 확대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분	기반마련 (~'13년 상반기)	본격추진 (~'13년 하반기)	정착 및 확산 ('14년~'17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출산, 노인대상 행정서비스맵 시범 제작 통합생활 민원정보 서비스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등 행정 서비스맵 추가과제 발굴 생활민원 정보서비스 시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제공 생활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및 기능 고도화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분석 기업활동 지원전담반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의견 수렴 등 전담반 본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확대 추진상황 모니터링·운영성과 분석
정보취약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센터 복지 허브 전환 연구 우체국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전환 방안 마련 및 합동추진단 운영 우체국 등 활용, 민원 서비스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전환 및 복지인력 확충 우체국 등 활용, 민원 서비스 성과분석 및 환류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맞춤형 서비스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개발사업 확정 문자, 영상, 앱 등을 통한 U-119 신고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기술 활용 추진과제 현장점검 등 성과분석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 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기술 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발굴·추진 농업재해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등 구축

□ 변화 및 성과관리

구분	기반마련 (~'13년 상반기)	본격추진 (~'13년 하반기)	정착 및 확산 ('14년~'17년)
변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3.0 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3.0 순회교육 및 각급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홍보컨텐츠 개발 및 일간지·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 정부3.0 대표 브랜드 정책 발굴, 중점홍보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3.0 성과관리 지표 개발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3.0 성과보고대회 개최, 성과관리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3.0 성과보고대회 개최(분기별), 정부3.0 추진성과 평가·분석

참고 2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예시]

대분야	중분야	사전공개 대상정보(예시)
국민 밀접 생활 정보	의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 어린이집 평가 인증결과 ·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약기관 명단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상시 체납자명단 · 국·지방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국민 안전	식품·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 위생의무 위반 업소 명단, 음식점 위생등급제 · 정수장·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농산물 안정성 조사
	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현황, 청소년 범죄현황 ·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 교통·산업·보건분야 안전정보 종합, 지수화(안전지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현황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분석 평가결과 · 자전거 도로 현황 ·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정부 투명성	계약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계약실적, 물품 구매현황, 수주실적 상위 조달업체 현황 · 공사발주 세부내용 및 계약 전 과정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 ·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재정 정보	지방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임원, 보수 등) 및 재정현황 · 지방 일반재정·교육재정·공기업 포괄 통합재정정보
	공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사·축제, 청사신축 등 주요 공공사업 원가정보 · 공공시설, 대규모 사업공사 관련 정보
	지역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 지자체별 주요 서민생활물가

※ 시민단체 공개 요구사항, 여론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민의 수요가 큰 정보를 추가 발굴, 공개 예정

참고 3 공공정보 개방 로드맵(예시)

※ 동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체조사에 근거한 잠정자료로서, 최종 연차별 개방계획은 공공DB 전수조사 및 민간 수요조사를 거쳐 수립예정('13.상반기)

구분	분야별	개방현황 (2012)	추가 확대계획(2017)
계		1,005종	6,400종
정부 운영	일반 공공행정	시사경제용어정보, 국회방송홈페이지정보, 지자체의회회의록정보, 영상회의정보, 국회방문자센터정보, 조달 입찰정보, 나라기록정보, 국가관리전산정보, 규제등록정보, 국기기록영상정보, 선거통계정보, 지방제세정보, 공기업경영공시정보, 지자체예산정보, (131종)	금융감독정보, 보험사고정보, 승강기안전관리정보,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공공기관경영정보, 예결산정보 (433종)
국가 안전 관리	통일 · 외교	주한공관정보, 북한학술정보, 수출입통관정보, 수입적하정보, 재외동포현황, 해외안전여행정보 (7종)	북한생활정보, 해외협력업체정보 (46종)
	국방	민방위국민행동요령정보, 국방기술품질정보, 국방정책정보, 방위물품통계정보, 해외국방산업동향정보, 군수품동향정보 전사자검색정보, 현충원 안장자 정보 (21종)	국가유공자복지정보, 예비군기록정보, 방산업체정보, 군수품규격정보, 입영통지정보, 병적증명정보 (152종)
	공공질서 및 안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보, 소방정보, 재외동포현황정보, 국가인권정책정보, 입법지원정보, 산사태정보, 산불정보 (42종)	112신고접수정보, 사건수사정보 (77종)
경제 산업	도시 및 지역개발	공시지가정보, 도시계획고시정보, 도시재성정보, 전통시장정보, 수문정보, 해양지리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83종)	도시계획정보, 토지매수정보 (527종)
	과학기술	국가생물종정보, 기상예보정보, 국가지진정보, 산림과학정보, 다국어음성정보 (55종)	천문우주지식정보, 해양위성정보 (54종)

구분	분야별	개방현황 (2012)	추가 확대계획(2017)
	농림해양 수산	냉동선어류정보, 농수산물가격유통정보, 농식품안전정보, 농업기술정보, 동물유전체정보, 작물정보 (31종)	도축검사정보, 농식품품질검역정보 (185종)
	산업·중소 기업	기업지원정보, 녹색인증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관련통계정보, 창업보육센터정보, 전기안전정보,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정보,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정보, 투자유치정보 (62종)	상권정보, 창업지원사업정보, 가구별전력량정보, 수력발전정보 (370종)
	수송, 교통	도로교통시스템정보, 서울도시철도정보, 대중교통정보, 항공운항정보, 교통량통계정보 (72종)	선박운항정보, 전국교통소통정보 (430종)
	통신	전자정보통신정보, IT통계정보, 우편번호정보, 인터넷주소자원정보 (11종)	방송콘텐츠제작정보, 통신망정보 (66종)
사회 복지	환경보호	건물별온실가스정보, 생태자연보호정보, 대기오염정보, 적조정보시스템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24종)	폐기물배출정보, 친환경상품정보 (152종)
	보건	병원평가정보, 국가암정보센터정보, 건강검진기관안내정보, 건강보험정보, 약물유전정보, 의료기기정보 (16종)	통합보육정보, 요양기관정보 (84종)
	사회복지	일자리제공정보, 노인일자리사업정보, 인재정보, 보건산업통계정보, 국가기술자격정보 (47종)	장애인고용정보, 창업정보 (191종)
교육 문화	문화체육 관광	문화유산정보, 국제종합경기대회정보, 영화정보, 국내관광정보, 한국사정보, 생활체육동영상정보, 공연정보 (172종)	체육시설예약정보, 저작권보유정보 (304종)
	교육	학술연구정보, 전자도서관정보, 디지털교과서정보, 교원연수정보, 지자체학업성취정보, 학위논문정보 (81종)	지방교육재정정보, 대학입시정보 (604종)

참고 4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강화
 -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을 SW 개발단계부터 사전 제거하는 「시큐어 코딩」 적용 확대
 - ※ (신규시스템) 40억 이상('13) → 20억 이상('14) → 모든 정보화사업('15)
 - (기존시스템) 시범적용·적용방안 마련('13) → 단계적 확대('14~'17)
- 전자정부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보안등급제」 도입·중점관리
 - 업무영향범위, 데이터 중요도 등 고려, 보안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상위 보안등급(1~2급)에 대해서는 보안수준 진단, 개선조치 강화
-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추진
 - 전쟁, 테러 등 물리적 공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전산시스템 보호,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3의 장소에 구축

□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안전한 활용 기반 구축

-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평가 및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민감 개인정보 사전 필터링 및 불법 오·남용 실태 점검
 - *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 및 「범정부 합동점검단」 운영
 -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결과는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인 비식별화(익명화) 처리기법 보급
 -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구축·운영(100여개, ~'17)